



 신항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 http://www.emerics.org/ 2018. 10. 25. 인도남아시아	「이슈&트렌드」 인도 내 디지털거래에 대한 ‘데이터 현지화’ 조치 발효 작성 송영철 전문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대양주팀)
---	--

- 2018년 10월 16일을 기점으로 인도 디지털 거래에 대한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발효, 총 78개 핀테크 업체 중 60여 개 업체가 로컬 서버 구축 이행 보고서 제출을 완료함.¹⁾
- Whatapps, Paypal 등 주요 핀테크 기업들은 로컬 서버 구축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반면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일부 기업들은 미제출한 상황²⁾
 - 인도중앙은행은 지난 4월 인도 내 핀테크 기업이 보유한 거래 정보를 인도 내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발표하고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유예
 - 특히 본 조치는 인도 내 디지털 거래 과정에서 생성되는 개인 정보를 해외 서버에 저장,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을 주 대상으로 함.

표 1. 최근 인도정부의 디지털 거래 및 개정 정보보호 관리 감독 강화 조치 경과

구분	주요내용
2018.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15일 유예기간 종료, 약 80% 업체가 관련 이행 보고서 제출을 완료 - 관련업체, 인도중앙은행 및 재무부에 기한 연장 요청 및 대안책 제시 - 인도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추진 중
201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중앙은행, 인도 내 핀테크 기업의 디지털 거래 정보 국내저장 의무화 조치 발표 - 2018년 10월 15일까지 유예기간 부여
20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법 추진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관련 연구 수행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 보험사의 해외 인터넷 서버 이용 금지(고객 정보 인도 내 저장 의무화) - 기업 내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드하르’ * 및 PAN(permanent account number) 카드의 모바일 연계 의무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인도 내 서버 구축 의무화 추진 - 중앙은행 산하 디지털거래 규제기관 설립 추진(사이버 보안, 이용자 보호 등)

주: *디지털 개인정보인증 플랫폼으로 인도 국민의 생체디지털개인정보(지문, 홍채)를 저장하고 있음.
 자료: 언론자료 종합

- 최근 외국 핀테크 기업들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규제 수준을 완화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 특히 비자, 마스터, 아마존, 페이팔 등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은 인도중앙은행 및 재무부와의 면담을 통해 3개월 기한 연장과 미러데이터 제공을 대안으로 제안³⁾
 - 이에 인도중앙은행은 인도에서 발생한 모든 인도 관련 거래정보는 인도 내에만 저장해야 하고, 철저한 디지털 거래 관리감독을 위해 ‘제약 없는 데이터 접근’이 필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⁴⁾

1) 카드, 결제 앱, 모바일지갑 등의 형태로 디지털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 로컬 및 외국기업에 모두 적용됨.

2) Livemint(Oct 15 2018). ‘Visa, Mastercard said to miss RBI’s data localization deadline’.

3) 데이터미러링은 해외서버에 원본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사본을 인도에 제공하는 방식임.

4) The Economic Times(Oct 14, 2018). ‘RBI sticks to October 15 deadline for data localisation’.

- 한편 자국 기업의 피해를 우려한 미국 측은 서한을 통해 이번 조치가 국경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활용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인도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⁵⁾
- 이에 인도정부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황, 다만 미이행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서버 구축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

□ 데이터 현지화'는 인도의 디지털 경제화 진전에 긍정적, 다만 현재 추진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 접근, 활용, 이동 등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불필요한 분쟁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

- 데이터 현지화는 인도정부와 로컬기업의 데이터 접근성, 활용도를 높여 효과적인 관리감독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한편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데이터 현지화만을 강제할 경우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의 혁신,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 존재
- 최근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보호주의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 현지화 비용 부담, 분산된 정보 활용의 비효율성 등을 우려⁶⁾ **EMERiCs**

표 2. 최근 주요국 데이터 보호무역주의 사례

국가	주요내용
중국	- 자국민 개인정보를 자국 서버에 보관하도록 하는 '네트워크안전법' 시행 예정(2019.1)
EU	- 역외 개인정보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2018.5)
러시아	- 러시아개인정보법, 러시아 개인정보는 러시아 내 저장, DB 위치 신고(2015.9)

참고자료

Livemint, The Economic Times 등

5) 미국정부가 아닌 미 상원 인도코커스(Indian caucus)의 입장임.

6) 이투데이(2018.5.14.) '글로벌기업, '데이터 보호주의'에 시름 짊어져'.